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

김 두 열** · 류 상 윤***

논문초록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 경상액 기준으로 77억 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456억 달러였다. 이 원조의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주로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총액은 약 20위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일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큰 밀어주기 (Big Push)” 가설에 근거한 추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증여, 양허성 공공차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15, O1, O5

투고 일자: 2014. 2. 2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4. 4. 30. 게재 확정 일자: 2014. 6. 13.

* 이 논문은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준 한국개발연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논문의 초고는 APEBHC, 낙성대경제연구소, 경제발전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좋은 논평을 해 주신 박복영 교수 및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e-mail: duolkim@mju.ac.kr

*** LG경제연구소, e-mail: syryu@lgeri.com

I. 서론

원조는 수원국(受援國)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원조는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가? 이 질문은 경제개발 업무 관련 실무가들이나 학계가 씨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원조가 성공했던 사례, 즉 수원국 가운데 지속적 경제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의 길로 접어들었던 나라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가장 치명적이다.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나 훌륭한 정책이라도 성공적 경제성장이라는 실증적 뒷받침을 얻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는 매우 중요한 연구거리를 제공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국이 된 뒤,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던 최빈국 중 하나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가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 원조를 받던 기간 동안, 외국으로부터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의 총액은 얼마인가?¹⁾ 매우 단순해 보이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체계적인 답을 제시한 문헌은 놀라우리만치 찾기 어렵다.²⁾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협력위원회(DAC)는 OECD 회원국들이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하기 시작한 1960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 제공하고 있

1) 우리나라는 1999년을 마지막으로 OECD/DAC의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이 연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2) 필자들이 확인한 한도 내에서는 이경구(2004)가 이러한 시도로서는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체계적인 답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2장 제4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다. 그런데 한국이 거액의 원조를 받았던 시대는 그에 앞선 1950년대였다. 때문에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계 속에 한국이 받은 원조는 누락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공백은 당연히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메워졌어야 했다. 물론 1960년대부터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가 받은 원조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DA라는 개념에 근거하지 않고 원조, 외자, 차관 등과 같은 통상적 범주를 다루었다.³⁾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자료들에서조차도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⁴⁾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리가 받은 원조를 논하는 것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볼 때도 가장 큰 문제는, 마치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리우듯, 한국이 받은 ODA를 세계 원조의 역사에서 “잊혀진 원조(Forgotten Aid)”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원조 관련 경험이 보편적 지식으로 승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준과 개념들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야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종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취지에서 본 연구는 1945년 이래로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체계적으로 추정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기준을 살펴본 뒤(제Ⅱ장), 우리나라에 주어진 원조에 대한 각종 통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이 기준에 맞는 원조액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제Ⅲ장). 이후 이 수치가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를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제Ⅳ장).

3)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괄은 제2장 제4절을 참조.

4)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의 ODA KOREA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홈페이지 등에는 OECD/DAC의 통계를 국내통계로 보완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ODA KOREA 홈페이지는 통계의 출처를 DAC와 재무부·한국산업은행(1993)으로, 그리고 KOICA 홈페이지는 이경구(2004)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값들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매년의 수치가 아닌 몇 개년의 합계치라서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II. 개념 정의 및 기존 연구 검토

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그 동안 우리 정부와 학계는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다름에 있어 원조(援助), 외자(外資), 외원(外援)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대외 원조를 측정하는데 있어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며, 좀 더 정확하게는 순ODA(net ODA)이다.⁵⁾

ODA는 1970년대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가 규정한 개념이다. DAC는 ODA를 공적 기구(중앙·지방 정부 또는 그 실무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DAC의 수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 또는 영토, 그리고 다자간 개발 기구에 제공한 증여(grant)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라고 정의한다.⁶⁾ 이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위 정의를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먼저 ODA는

$$ODA_{jt} = G_{jt} + CL_{jt} \quad (1)$$

ODA_{jt} : j 국이 t 년도에 받은 공적개발원조 총액

G_{jt} : j 국이 t 년도에 받은 증여 총액

5) OECD (2008), Chang, Fernandez-Arias, and Serven (1999, p. 2).

6) OECD (2008), Chang, Fernandez-Arias, and Serven (1999, p. 2). 참고로 OECD가 제시한 정의를 그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OECD, 2008, p. 1 참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defined as those flows to countries and territories on the DAC List of ODA Recipients (available at www.oecd.org/dac/stats/daclist) and to 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 which are:

- i. provided by official agencie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y their executive agencies; and
- ii. each transaction of which:
 - a) is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its main objective; and
 - b) is concessional in character and conveys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 cent (calculated at a rate of discount of 10 per cent).

CL_{jt} : j 국이 t 년도에 받은 양허성 차관 총액

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ODA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 그리고 상환조건이 관대하여 증여적 성격이 강한 공공차관으로 구성된다.⁷⁾ 차관의 양허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통상 증여율이 25% 이상인지 여부이다. 즉, 차관제공액을 L ,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현재가치를 E 라고 할 때 증여율(r)은

$$r = \frac{L - E}{L} \quad (2)$$

이며, $r \geq 25\%$ 일 때 양허성 공공차관으로 간주된다. 단, 이자 및 원금상환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 10%를 일괄 적용한다.⁸⁾

아울러 순ODA는 증여와 양허성 차관의 합에서 상환(loan repayment)을 제한 것, 즉 ODA 순수령액을 지칭한다.

$$\begin{aligned} NODA_{jt} &= ODA_{jt} - RP_{jt} \\ &= G_{jt} + NCL_{jt} \end{aligned} \quad (3)$$

$NODA_{jt}$: j 국이 t 년도에 받은 순ODA(Net ODA) 총액

RP_{jt} : j 국이 t 년도에 지불한 총상환액

NCL_{jt} : j 국이 t 년도에 받은 양허성 차관 순수령액($= CL_{jt} - RP_{jt}$)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ODA에는 군사 원조(military aid)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⁹⁾ 이 점은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받은 원조를 과연 ODA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막대한 양의 군사 원조를 제공받았으며 경제 원조로 분류된 것들도 군사적 성격을 가진

7) 이를 각각 ODA 증여(ODA grants), ODA 차관(ODA loans)라고 부르기도 한다.

8) 주 6 참조.

9) OECD (2008, p. 2).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홍성유(1965), 이대근(1984, 1987) 등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성격의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볼 때 당시 원조 당국과 한국 정부가 군사 원조와 구분해서 경제 원조라고 분류한 것들은 ODA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당시 집계된 경제원조를 ODA로서 취급하여 추계 작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2. 공적개발원조, 원조, 외자 간의 관계

이상의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던 기존 용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원조(aid)는 증여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¹⁰⁾ 단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우리나라가 1960~7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자금(PAC: Property and Claims)의 포함 여부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대일 청구권 자금은 ODA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¹⁾ 하지만 원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통계나 학계의 관련 연구는 대개 원조를 미국과 UN 등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에 국한하고, 대일청구권 자금은 원조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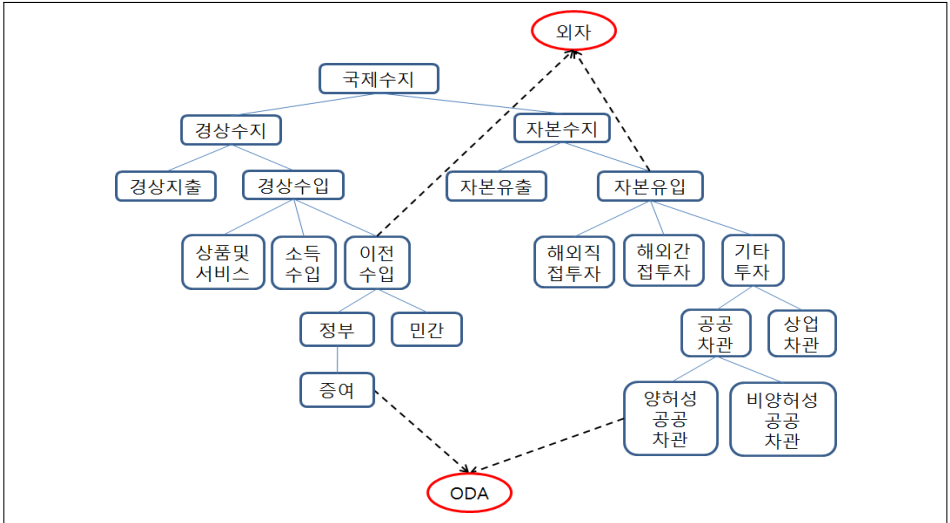
외자(foreign capital)는 해외를 원천으로 하는 모든 자본을 가리킨다.¹²⁾ 국제수지표로 설명하면 경상수지 상의 경상이전수입과 자본수지 상의 자본유입 전체를 합한 개념이다(〈그림 1〉 참조). 이에 비해 ODA는 경상이전수입 중 정부에 대한 증여, 그리고 자본수지 중 양허성 공공차관만을 의미한다. 이처럼 외자는 ODA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ODA가 전체적인 국제자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ODA 자체를 파악하는 개념으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10) 외원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즉 “foreign aid”를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원조와 동일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11) 즉 대일청구권자금 중 무상지급분은 증여, 유상지급분은 양허성 차관에 해당한다.

12) 김찬진(1976, p. 1).

〈그림 1〉 외자와 ODA: 국제수지표 상의 상응 항목



자료: 한국은행 (1998).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자본수지표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항목들을 집계해서 발표해 왔다. 그러나 자본수지표 자체만으로 ODA를 바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양허성 공공차관의 판별 문제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에는 공공차관을 양허성 기준에 따라 ODA냐 아니냐로 나누고 그 도입액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 통계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 역시 차관 일반을 다룰 뿐 ODA라는 기준에서 공공차관을 양허성 기준으로 분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¹³⁾ 따라서 양허성 공공차관을 분리, 집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OECD 통계를 활용하고 국내통계를 이용해서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3. 원조규모 및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상의 경제이론적 기초는 근대적 경제성장론의 원조인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의 1956년 논문에서 가장 체

13) 이경구(2004, pp. 286-341)는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DB를 이용하여 공공차관 사업을 양허성과 비양허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매년의 도입액을 분리집계하지는 않았다.

계적으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¹⁴⁾ 흔히 솔로우 모형이라고 불리는 그의 고전적인 경제성장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 즉 일인당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인당 자본규모이다. 만일 저개발국에서 충분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소득과 투자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경제를 정상 상태(steady state)까지 자동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 언명은 저개발국과 선진국 간에 소득수준의 수렴(convergence)이 나타날 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함축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ODA를 제공하였고, 이것이 저개발국의 일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개발도상국들에 공여된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발전에 성공을 보인 나라는 한국과 같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¹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솔로우 모형 자체,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경제발전 정책들은 그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모두 개괄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성장론 또는 경제발전론 연구 모두를 살펴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원조 총량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해서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이것이 본 연구에 대해 갖는 시사점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등은 솔로우 모형이 제시한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원조 총량이 여전히 중요함을 지적한다. 삭스는 저개발국들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솔로우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넘어설 만큼 ‘큰 밀어주기(Big Push)’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ODA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¹⁶⁾

둘째,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원조의 총량보다는 원조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측면

14) Solow (1956).

15) 원조가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최근의 연구로는 Collier (2007), Easterly (2006), Moyo (2009) 등이 대표적이다.

16) Sachs (2005). 큰 밀어주기(Big Push)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Rosenstein-Rodan (1943), Murphy, Schleifer, and Vishny (1989) 참조. 한편 Sachs (2005)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는 Easterly (2006) 참조.

에 주목한다. Burnside and Dollar (2000)는 이러한 접근의 기초를 제공한 선구적 연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근거해서 원조효과성은 원조수혜국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에 따라 달라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강조하는 것은 원조의 성공 여부는 원조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제대로 활용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¹⁷⁾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⁸⁾

삭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원조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른 한편 원조의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원조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체적인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여전히 총량은 중요하다.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한국의 경험에 투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은 유사하지만 보다 많은 양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즉 큰 밑어주기의 도움으로 빈곤의 덫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원조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원조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애 끼친 영향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제3장과 제4장에서 이루어질 추계 및 비교 작업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기초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4. 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연구 검토

해방 이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공적개발원조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

17) 개발도상국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 Burnside and Dollar (2000)의 주장은 Easterly, Levine, and Roodman (2004)에 의해 실증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Burnside and Dollar (2004)의 반론도 참조.

18) Banerjee and Duflo (2011)는 이러한 흐름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대표적인 저작이다. 물론 기존 원조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연구들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원조 효과성 증진을 주장하는 연구들로 이해할 수 있다.

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적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원조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서남원(1963)은 증여가 단기적인 생활수준 제고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였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uh(1976, 1977), Krueger(1977), 서석태·강정모(1978), Cole(1989)은 원조가 자본 및 기술 부족, 투자재원 부족 등과 같은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강석인(1994)은 회귀분석 등을 통해 외자도입이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던데 비해 이후에는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홍성유(1962, 1965), 박현채(1978), 박찬일(1981), 김대환(1981), 정일웅(1984, 1989), 이재희(1984), 김양화(1985, 1987), 장상환(1985), 이대근(1987), 배인철(1988), 노중기(1989)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에 제공된 증여가 공여국 즉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우리 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저해하였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구조를 왜곡시켰으며, 궁극적으로 한국경제를 공여국 경제에 종속시켰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이후의 차관을 분석한 이대근(1984, 1986)은 차관 역시 증여와 유사한 부작용을 낳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논쟁은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이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나 차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2000년대 들어 원조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는 현실적, 정책적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철순(2002), 정진아(2007), 박태균(2006), 이현진(2009) 등은 원조 도입과 관련된 한미 당국 간 논쟁 등을 살펴으로써 원조가 단순히 미국의 의도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원조의 도입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원조의 실태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은 아니었다.

한편 원조가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최근 들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이대근(2002)은 1980년대 이전에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기각하고 원조가 우리 경제를 파행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한다. 최상오(2003, 2005)는 1950년대의 경제 부흥 노력과 수입대체공업화 및 환율 관련 정책에 있어서 원조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조망하였다. 김준경·김광성(2012)은 원조가 제공된 주요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ODA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연

구들에서도 원조의 규모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반해서 논지를 전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조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여전히 연구사에서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ODA 개념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받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파악한 가장 체계적인 선행 연구로는 이경구(2004)가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제공된 해외로부터의 지원을 ODA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다양하게 살펴본 매우 포괄적인 작업이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사실상 최초로 ODA 수령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에 제공된 ODA를 127.8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다.¹⁹⁾ 그러나 보고서는 이 수치를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gross) 수령액과 순(net) 수령액, 명목액과 실질액을 구별하지 않았다.²⁰⁾

한국이 제공받은 ODA 규모의 파악이 가지는 학술적,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집계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통계를 작성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규모를 평가해 보는 본 연구의 작업은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에 대한 연구를 역사연구의 한 분야로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정책 연구의 기반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Ⅲ.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받은 공적개발원조 총액을 추계, 제시하기로 한다. 1945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조를 받기 시작한 해이다. 1999년은 우리나라가 DAC의 수원국 명단에 기록된 마지막 해로, 2000년부터 한국은 이 명단에서 제외된다.²¹⁾ 따라서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받은 액수의 합으로 정의된다.

이하에서는 식 (1)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받은 ODA를 증여와 양허성 공공차관으로 나누어 상세한 자료 검토를 통해 각각의 규모를 파악한 뒤,

19) 이경구(2004, pp. 72-74).

20) 이 추정치는 제3장 제3절과 비교해 볼 때 조ODA 명목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1) 이후 2010년에 우리나라는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여국 지위를 획득한다.

최종적으로 양자를 합하여 ODA 총액을 제시하기로 한다. <부표 1>에는 추계 결과를 연도별, 항목별로 제시하였는데, 이하의 논의는 이 표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1. 증여

1) 자료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1) OECD/DAC의 ODA 통계, 2) 한국은행의 외국원조수입총괄표, 3)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이전거래), 그리고 4) 미국원조청(USAID)의 미국해외차관 및 증여 통계가 있다(<표 1> 참조).

<표 1> 증여 통계 수록 1차 자료

통계명	집계기관	수록발간물	기간	비고
Aid(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	OECD/DAC	http://stats.oecd.org	1960-현재	
외국원조수입총괄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45-1983	미국 또는 관련기구의 원조만을 포함
국제수지표 (이전거래-정부)	한국은행	한국의 국제수지, 국제수지통계	1950-1982	정부의 경상이전수입이 증여에 해당하나 1974년부터는 조세 이전 등도 섞여 있음
미국해외차관 및 증여 통계 (U.S. Overseas Loans & Grants)	USAID	http://gbk.eads.usaidallnet.gov	1946-현재	지출액이 아닌 계약액, Suh (1976) 에도 관련 통계 있음

가. OECD/DAC의 ODA 통계

OECD/DAC의 ODA 통계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DA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통계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OECD 회원국들이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통계만을 담고 있다.²²⁾ 우리나라가 1960년 이후에 받은 증

2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OECD/DAC의 ODA 통계는 2012년 9월경 다운로드한 것으로 미국 달러 단위로 당년 가격(current price)과 2010년 불변 가격(constant price)의 값이 기록되어 있다.

여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다른 통계와의 상호비교를 통해 점검하였다.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국내외 통계들을 이용해서 확인하기로 한다.

나. 외국원조수입총괄표

외국원조수입총괄표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경제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이다. 이 자료는 미국 대외원조기관의 주한 사무소가 발행하던 월별 상황 보고서(monthly status reports)를 기초로 작성되었다.²³⁾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증여에 관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UNKRA와 같은 UN 기구가 제공한 증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원조 역시 사실상 미국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일협약 이후의 청구권자금(무상분)이나 IBRD 등의 기술원조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미국 중심의 자료라는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USAID의 신규 프로그램은 1979 미 회계연도(1978년 10월~1979년 9월)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고 주한 사무소도 1980년 9월 활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외국원조수입총괄표도 1983년까지만 작성되었다.

다. 국제수지표

한국은행은 매년 『국제수지통계』를 발간한다. 이 중 국제수지표의 경상계정 중 ‘이전수입-정부’는 <그림 1>의 경상이전수입 하의 ‘정부’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 집계되어 있다. 1987년에 발간된 『국제수지통계』에는 1960~86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전거래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와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취합하면, 시계열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전수입-정부’ 항목은 AID, PAC(청구권자금), 기술원조, PL480,²⁴⁾ 기타로 이루어져 있고, ‘이전지급-정부’는 협정제비,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²⁵⁾ 외국원조수입총괄표와 비교해 보면, AID, PL480은 두 자료 모두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청구권

23) 미국 대외원조기구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홍성유(1965) 등을 참조.

24) PL480이란 미공법(Public Law) 480호에 근거한 잉여농산물 도입분을 가리킨다.

25) 1973년까지 ‘이전수입-정부’ 중 기타는 ‘이전지급-정부’ 중 협정제비와 일치한다. 이것은 원조 기구 운영비를 가리킨다.

자금과 기술원조는 ‘이전수입-정부’ 항목에만 들어 있다.²⁶⁾ 단, 청구권자금과 IBRD 등의 기술원조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므로, 두 자료에 수록된 1950년대 통계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ODA 추계와 관련해서 ‘이전수입-정부’ 자료를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할 문제는 정부 간 이전거래가 증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전수입-정부’의 구성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타” 항목이 1974년부터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정부 간 조세 이전 등이 새롭게 포함된 탓이다.²⁷⁾ 따라서 1974년 이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ODA 증여 통계로서 활용하기 어렵다. 참고로 기타를 제외할 경우, ‘이전수입-정부’ 항목은 1983년부터 값이 0이 된다.

라. 미국원조청 통계

미국원조청 (USAID) 의 홈페이지에는 미국해외차관 및 증여 (U. S. Overseas Loans & Grants)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원국 및 프로그램별로 1946년부터 현재까지의 원조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이 통계는 미국 회계연도 (fiscal year) 기준이고 실제 지출이 아닌 지출원인행위 (obligation) 개념에 기초하여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DAC의 지출액 (disbursement) 과는 차이가 있다.²⁸⁾ 다만 계약액과 지출액의 차이, 사업이 완료된 후의 총지출액 정도는 ODA 추계에 참고할 수 있다.

2) 검토 결과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의 연도별 금액은 1945년부터 1960년 이전까지는 “외국원조수입총괄표”의 값을, 그리고 1960년부터 1999년까지는 OECD/DAC의 값을 사용할 경우 일관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다. <부표 1>의 증여 항목은 이렇게 집계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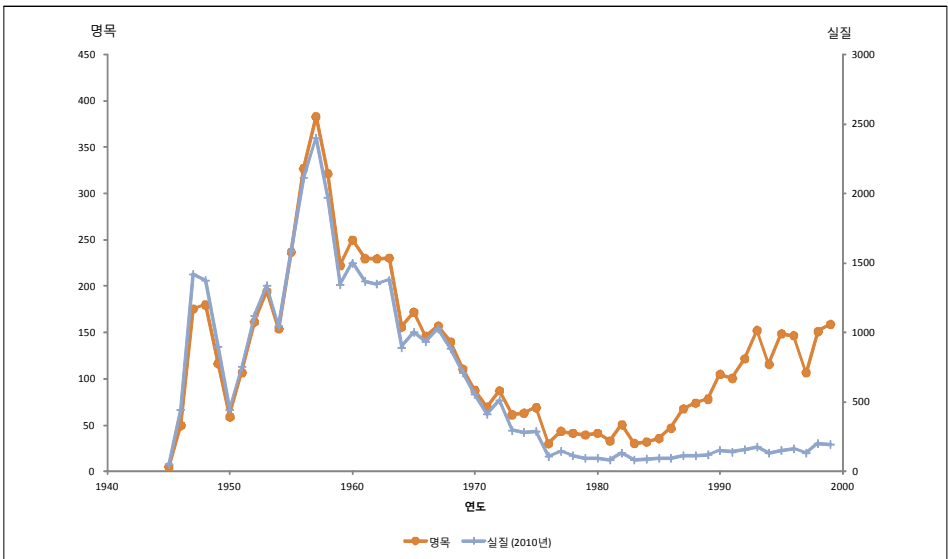
26)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원조수입총괄표는 그해 도입된 잉여농산물의 양을, 국제수지표는 판매 수입 중 그해 한국정부로 양도된 금액을 집계한다. 경제연감의 각주에도 “미공법 480호에 의거한 도입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의 일부는 미측에 사용되므로 이는 원조로 간주할 수 없으나 본 표에서는 편의상 도입총액을 게재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27) 1976년에 갑자기 이전거래-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8) “지출원인행위는 부처가 계약·구매·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며, 지출은 수표의 발행·전환·혹은 현금지불 등을 통하여 채무가 변제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국회사무처, 1997, p. 18 참조). 미국 회계연도는 FY1976까지는 전년 7월 1일부터 전년 6월 30일까지, FY1977부터는 전년 10월 1일부터 전년 9월 30일까지를 가리킨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파악한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증여 총액은 68.9억 달러이다.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347.2억 달러에 해당한다. 〈그림 2〉는 연도별 증여액의 추이이다. 증여는 1957년에 3.8억 달러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1970년대 말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증여의 감소 추이 가운데 1960년대의 변동은 ODA의 감소가 아니라 공공차관으로의 대체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한국에 제공된 ODA 증여(Grants), 1945-1999:
명목 및 실질액(2010년 기준, 백만 달러)



자료: 〈부표 1〉.

아울러 한 가지 언급할 점은 1980년 이후 명목 증여액의 추이이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증여를 받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증여액의 규모는 사실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1990년에 받은 증여는 1.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 GDP의 0.03%에 불과하다. 아울러 실질액 추이를 보더라도 1990년대의 명목 증여액 상승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1985년부터 우리나라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증여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도 이러한 추세를 이해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

나라가 받는 증여는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 정도까지 약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그 이후로는 빠른 속도로 중요성이 감소해 갔다고 할 수 있다.

2. 양허성 차관

1) 자료

1959년 1월 우리 정부는 동양시멘트(주)의 시설확장을 위해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과 214만 달러의 재정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양허성 차관, 즉 ODA 차관이였다.²⁹⁾ 이후 우리나라에 제공된 ODA 가운데 증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한 대신 양허성 차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받은 양허성 차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통계는 OECD/DAC가 제공하는 ODA 차관 통계이다(〈표 2〉 참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여국이 작성해서 DAC에 보고한 것을 취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양허성 차관의 규모를 파악하였다(〈부표 1〉 참조).

수원국이었던 한국정부가 ODA 개념에 기초한 차관 통계를 집계한 적은 없다. 단, 우리나라가 들여온 공공차관 총액이 얼마인지는 정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ODA 차관 통계와 비교함으로써 전체 차관 도입 가운데 양허성 차관의 비중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 2〉 ODA 차관 관련 통계 수록 1차 자료

	집계기관	수록발간물	기간	비고
Aid(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	OECD/DAC	http://stats.oecd.org	1960-현재	
공공차관 인출액, 상환액	재무부	공공차관현황	1959-1988	비양허성도 포함
국제수지표 (공공차관)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IMF 신기준에 의한 개편 국제수지통계 해설	1960-현재	비양허성도 포함

29) 재무부 경제협력국(1987, p. 20), 김찬진(1976, p. 57).

공공차관 통계는 외자도입을 담당한 부처였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그리고 외환의 유출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에서 집계, 관리하였다. 이 중 외자도입 담당부처의 통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간행된 일련의 발간물에 제시되었고 한국은행 통계는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데, 자료별로 수록하고 있는 기간이 다르고 수치가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³⁰⁾ 검토 결과, 공공차관 도입총액은 시계열이 긴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1960년부터 96년까지를 파악하고, 상환액을 차감한 순차관은 1979년까지는 재무부(1989), 이후는 한국은행 자료로 파악하기로 한다.³¹⁾

2) 검토 결과

최초의 공공차관이 도입된 1960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한 양허성 공공차관은 57.3억 달러였다(〈부표 1〉 참조).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도입한 전체 공공차관의 약 2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³²⁾ 〈그림 3〉은 공공차관과 양허성 공공차관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조공공차관(Gross Public Loan), 즉 도입총액 추이를 보여주는 (A)에 따르면, 공공차관 총액은 1982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상승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감소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는 공공차관과 양허성 공공차관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한데, 이는 이 시기까지 도입된 공공차관 대부분이 양허적 성격의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양허성 차관은 2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면, 비양허성 차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양자 간에 격차가 벌어져 갔다. 결국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양허적 성격의 지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갚은 외국자본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순공공차관(Net Public Loan), 즉 상환액을 뺀 순차관 도입액의 추이를 보여주는 (B) 역시 기본적으로는 (A)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1982년을 정점으로 공공차관 도입액이 감소하면서 1986년이 되면 사실상 상환액이

30) 재무부 경제협력국(1987), 재무부(1989), 재무부·한국산업은행(199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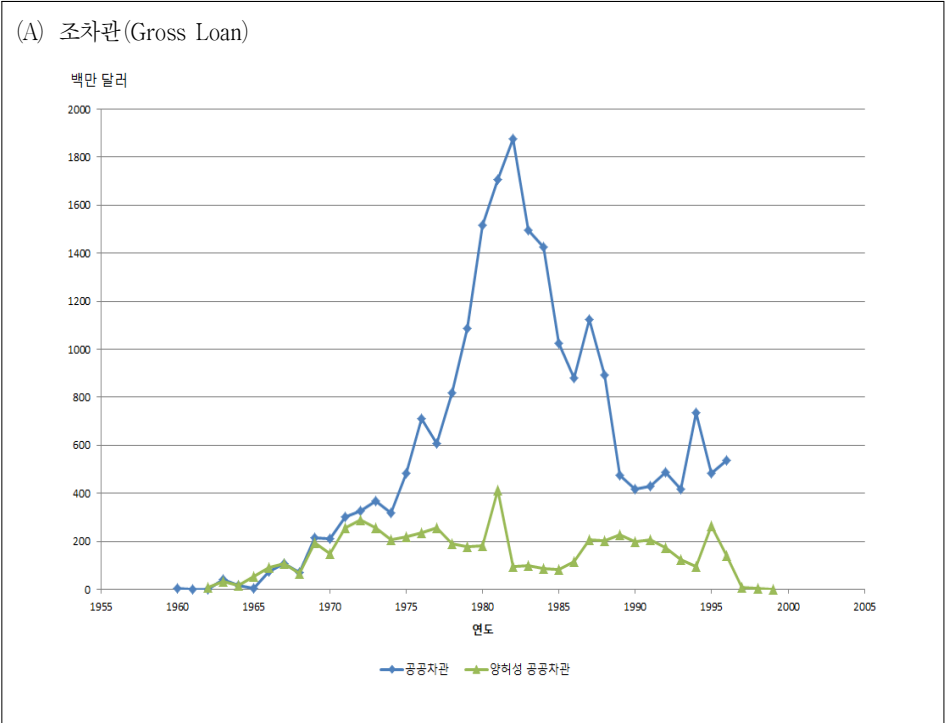
31) 1997년 이후 공공차관 도입총액이 얼마인지를 집계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32) 〈부표 1〉에서 공공차관 중 조차관(명목)의 총합계액은 216.7억 달러이다. 단 이 수치는 1996년까지만 포함하므로, 1999년까지의 수치는 이보다 다소 크리라고 보고 양허성 차관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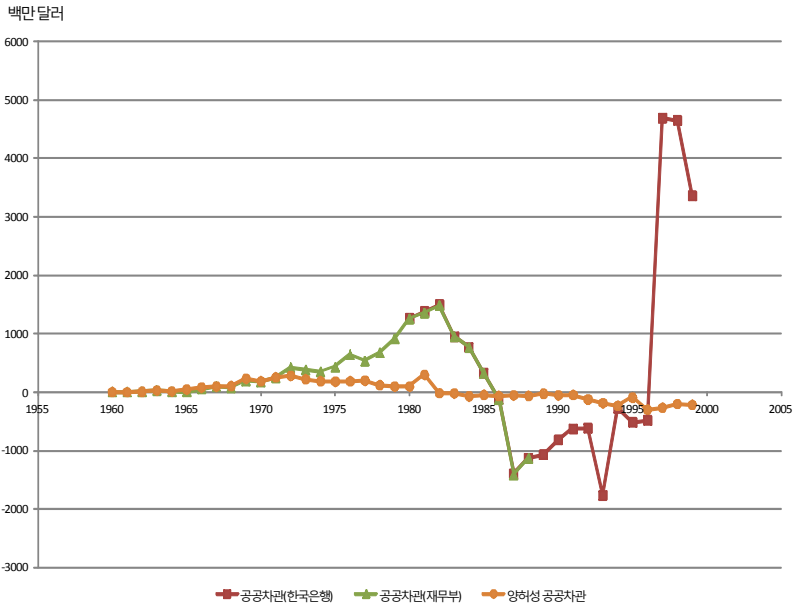
도입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차관 증가를 제외하고 본다면, 경제발전에 실제로 기여하는 공공차관 도입은 1980년대 중반에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차관 전체의 변동 추이를 배경으로 해서 양허성 공공차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부터 1999년 기간 동안 상환액을 제외한 순도입액, 즉 순 양허성공공차관은 8.5억 달러였다. 이 값은 조양허성 공공차관 도입액 57.2억 달러의 15%에 해당한다. <그림 4>는 조차관 및 순차관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는 차관의 도입만 이루어지고 상환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두 곡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982년 이후로는 차관에 대한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양허성 차관 순도입액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즉 양허성 공공차관의 도입 역시 전체 공공차관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도입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 3> 공공차관과 양허성 공공차관(명목액,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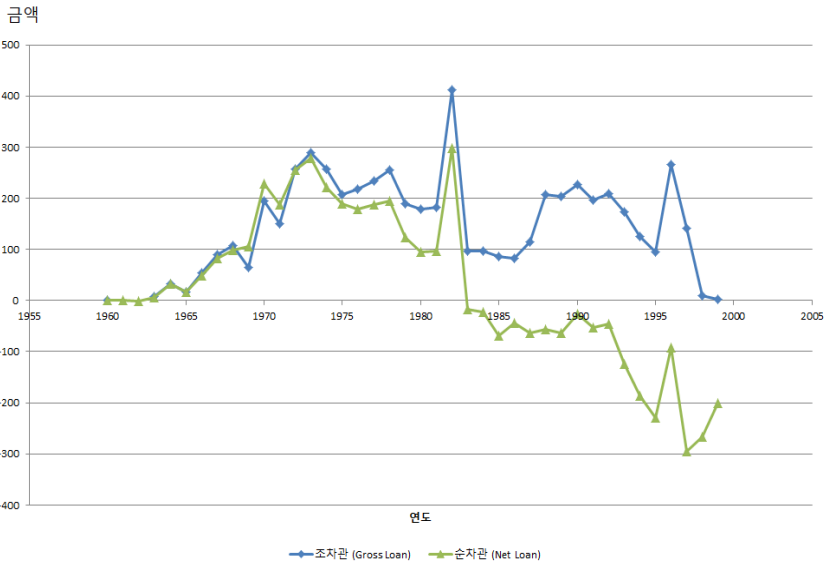


(B) 순차관(Net Loan)



자료: 본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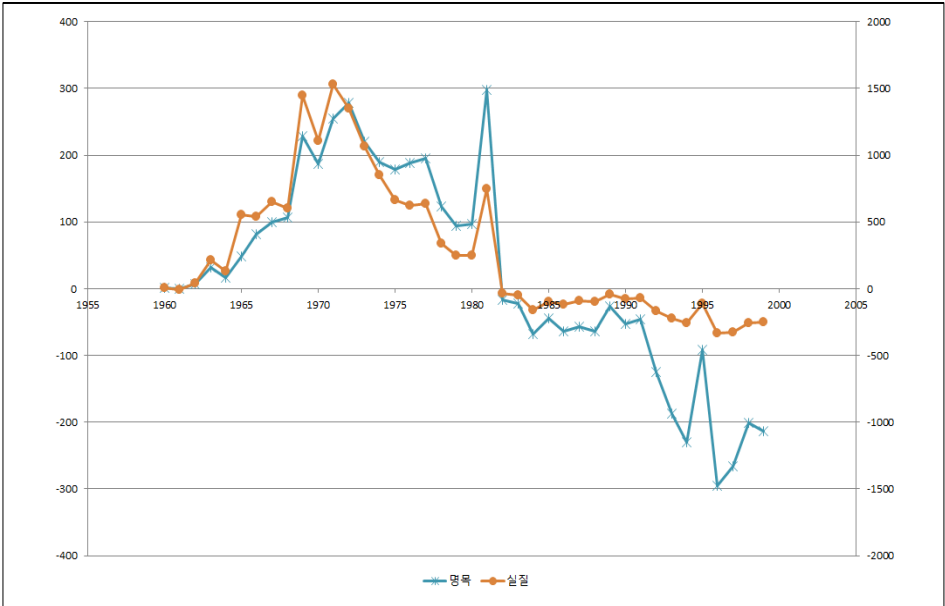
〈그림 4〉 양허성 공공차관: 조차관 및 순차관(명목액, 백만 달러)



자료: 본문 참조.

해당 기간 동안 순양허성 공공차관 도입액을 2010년 실질액으로 환산해 보면 108.4억 달러이다. <그림 5>는 순양허성 공공차관의 명목액과 실질액 추이를 보여 준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명목 상환액 규모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하지만 실질액을 계산해 보면 사실상 상환액이 도입액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상환에 따른 실질적 부담은 그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순양허성 공공차관: 명목 및 실질액(2010년 기준, 백만 달러)



자료: 본문 참조.

3.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연도별 증여 및 양허성 공공차관을 합하면 1945년부터 199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받은 ODA 규모를 구할 수 있다. <표 3>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순ODA 총액(Total Net ODA: TNODA)은 연도별 경상액을 합하면 약 77억 달러, 2010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56억 달러이다. 휴전이 이루어진 1953년부터 1999년까지를 대상으로 계산해 보면, 명목 순ODA 수령액은 69억 달러, 2010년 기준 실질액은 391억 달러가 된다.

〈표 3〉 1945-1999년 기간 동안 한국에 제공된 ODA 총액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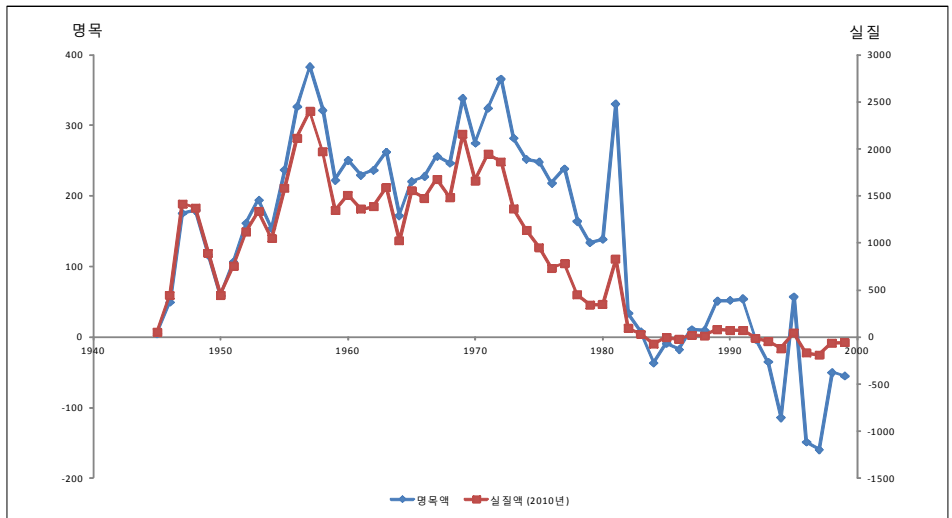
연도	명목액					실질액(2010년)				
	증여	차관		ODA		증여	차관		ODA	
		조차관	순차관	조ODA	순ODA		조차관	순차관	조ODA	순ODA
	A	B1	B2	A+B1	A+B2	C	D1	D2	C+D1	C+D2
1945-1970	4.6	0.7	0.8	5.3	5.4	29.9	5.0	5.3	34.9	35.2
(1953-1970)	3.7	0.7	0.8	4.5	4.6	23.4	5.0	5.3	28.4	28.7
1971-1999	2.3	5.0	0.0	7.3	2.3	4.8	13.5	5.6	18.4	10.4
1945-1999	6.9	5.7	0.9	12.6	7.7	34.7	18.6	10.8	53.3	45.6
(1953-1999)	6.0	5.7	0.9	11.8	6.9	28.2	18.6	10.8	46.8	39.1

주: 연도별 액수는 〈부표 1〉 참조.

자료: 〈부표 1〉.

〈그림 6〉 우리나라가 받은 공적개발원조(순ODA), 1945-1999:

명목 및 실질액(2010년 기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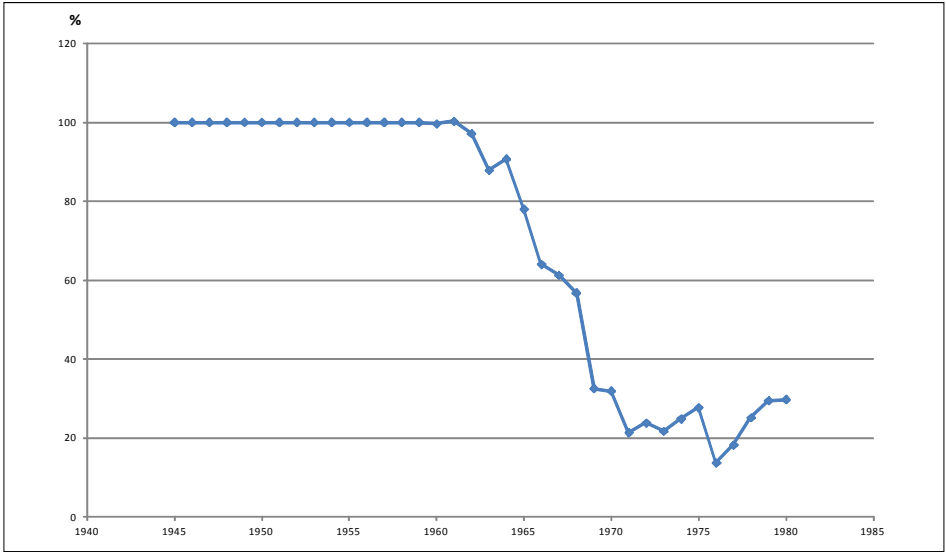
자료: 〈부표 1〉.

ODA 수령액은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부표 1〉, 〈그림 6〉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ODA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은 1970년대 중반 이전이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이미 실질적 의미는 없어지게 되었다.

즉 DAC의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이미 20년 전에, ODA는 우리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의미를 논하기에는 이미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전 기간 동안 증여와 차관 간의 비중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그림 7〉 참조). 순ODA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는 증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그 이후로는 증여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공공차관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비중의 변화는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 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데 대해 공여국이 지원 조건을 바꾼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림 7〉 순ODA 중 증여의 비율, 1945-1980(%)



자료: 〈부표 1〉을 이용해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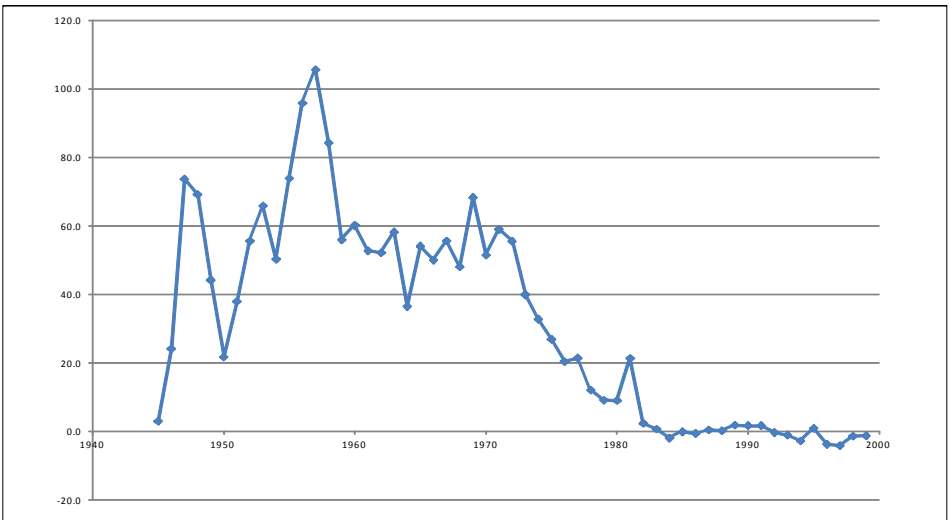
그렇다면 ODA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되는 규모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인구일인당 순 ODA로

$$PNODA_{jt} = \frac{NODA_{jt}}{Population_{jt}} \tag{4}$$

와 같이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ODA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김낙년 편(2012, pp. 519-520)의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1946년 이후의 일인당 ODA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2010년 가격 기준으로 볼 때 1957년에 106달러로 정점을 찍고 1960년대에는 50-60달러 정도이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감하였다(<그림 8> 참조). 이 내용을 일반화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ODA를 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약 30년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2010년 가격 기준으로) 일인당 연평균 50-60달러 정도의 ODA를 받은 셈이다.

<그림 8> 국민1인당 순ODA, 1945-1999(2010년 불변액, 달러)



자료: 본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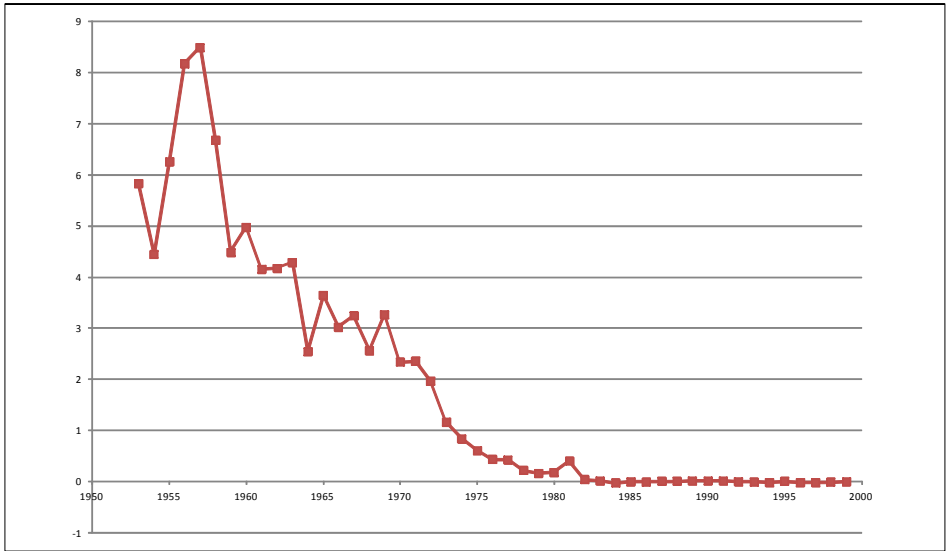
둘째로 경제규모 대비 ODA 규모, 또는 국민일인당 소득 대비 ODA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순ODA를

$$GNODA_{jt} = \frac{NODA_{jt}}{GDP_{jt}} \times 100 \quad (5)$$

와 같이 계산해 보기로 한다. GDP는 국제비교를 위해 PPP를 사용해서 작성된

Penn World Table 8.0을 이용하였다.³³⁾ 계산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순ODA는 시기별로 큰 변동을 보이는데, 1957년에 8.5%로 가장 높았다(〈그림 9〉 참조).³⁴⁾ ODA 총액이나 인구일인당 순ODA와 마찬가지로, 이 지표 역시 1950년대 후반이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ODA를 받던 기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이 비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1970년대 중엽이 되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림 6〉과 결합해서 보면, 1960년대에 GDP 대비 ODA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부분 GDP 성장으로 설명이 된다. 이후의 급속한 감소는 GDP 증가와 ODA 감소 양자가 작동한 결과이며,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ODA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 9〉 GDP 대비 순ODA, 1953-1999(%)



자료: 본문 참조.

33) 보다 구체적으로는 Penn World Table 8.0의 cgdpo(output-side real GDP at current PPPs in million 2005US\$) 변수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국제비교에서 각국의 GDP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 것이다.

34)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어떤 PPP 추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GDP 대비 순ODA 규모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공일 외(2010), 제1권, p.24 〈그림 5〉와 SaKong and Koh(2010), p.30 〈그림 2-8〉은 한국은행(1968)을 이용해서 이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1957년 GDP 대비 순ODA가 23%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Penn World Table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V. 국제비교

이 장에서는 전 세계 ODA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한국이 받은 ODA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앞서의 추정 결과 그리고 OECD/DAC의 ODA 통계를 이용해서 평가해 보기로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국의 ODA는 1960년 이전 부분을 포함하는데 비해, DAC 통계는 1960년 이후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일치 하에서의 분석은 ODA 총액 등을 비교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규모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1960년 이전에 이루어진 원조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포괄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편의의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4〉 ODA 총액 국제비교

(단위: 2010년 기준 실질액, 백만 달러)

명칭	정의	수원국				한국		비교
		평균	중위수	최고값	최저값	액수	순위	
TNODA	순ODA 총액	16,811 (16,775)	6,730	196,534	26	45,554 (39,058)	18 (23)	181개국
		20,159 (20,110)	9,321				18 (22)	134개국 ²⁾
HNODA	순ODA 5년평균의 최대값	867.3	339.9	11,949	3.0	1,881.7	23	180개국 ¹⁾
HPNODA	1인당 순ODA 5년평균(달러/인)의 최대값	165.9	94.9	1,315.7	3.3	83.0	74	134개국 ²⁾
HGNODA	GDP 대비 순ODA 5년평균(%)의 최대값	10.5%	4.7%	201.6%	0.0%	7.0%	49	134개국 ²⁾

주: ()안은 한국전쟁을 고려하여 1953년 이후만 합산했을 때의 값이다.

1) 181개국 가운데, 5년 연속 ODA를 받은 적이 없는 코소보를 제외하였다.

2) OAD 수원국 181개국 가운데 PWT와 연결되는 나라들의 수를 의미한다.

자료: 본문 참조.

ODA 규모의 비교에 있어 총량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시기별 분포이다. 국가별로 ODA를 받은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나라는 일정 수준의 ODA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받는 반면, 다른 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계산하여 비교를 해 본 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ODA 총액, ODA 최고액, 일인당 ODA, GDP 대비 ODA 값을 차례대로 계산해서 비교, 평가하기로 한다. <표 4>는 계산결과를 종합한 것이고, 이하에서는 각각의 계산 방식, 분석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순ODA 총액

먼저 각국이 받은 순ODA 총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즉, j 국이 1960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순ODA 총액 $TNODA_j$ 는

$$TNODA_j = \sum_{t=1960}^{2010} NODA_{jt} \quad (6)$$

가 될 것이고, 이 값들과 우리나라의 수원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³⁵⁾ 여기서 $NODA_{jt}$ 는 2010년 불변 달러 단위로 환산한 j 국의 t 년도 순ODA 수원액을 사용하였다.

OECD DB에 수록된 181개국(영토 포함)에 대해 이 지표를 계산해 본 결과, 가장 적게 받은 곳은 2,600만 달러를 받은 버뮤다이고,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1,965억 달러를 받은 인도로 나타났다. 전체 수원국이 받은 수량액의 평균은 168억 달러였다. <부표 2>는 $TNODA_j$ 상위 25개국을 제시하였는데, 인도 외에 최상위에 속한 국가는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라크, 중국, 탄자니아, 이스라엘 등이었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파괴를 고려하여 1945년 이후와 1953년 이후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산하여 비교하였는데, 전자는 18위, 후자는 23위에 해당하였다. 이 결과

3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를 합한 값이다.

는 우리나라가 원조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자료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 자체는 기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순ODA 최고액

ODA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액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된 제공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간의 집중 원조가 같은 액수를 장기간에 조금씩 제공하는 것보다 이른바 큰 밀어주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j 국의 순ODA 최고액($HNODA_j$)을 다음과 같이 측정해 보기로 하자.

$$HNODA_j = \max \left[\frac{1}{5} \sum_{t=k-2}^{k+2} NODA_{jt} \right] \quad (7)$$

이것은 k 년을 중심으로 하는 5개년 평균을 구한 뒤, 그 가운데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기간을 찾아냄을 의미한다.³⁶⁾

〈부표 2〉에는 상위 25개 국가들에 대해 각 국가들의 최고액 중심연도(즉 k 년)와 $HNODA$ 값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ODA를 가장 많이 받은 5년간이 1955-59년 간이고 이 기간의 $HNODA$ 는 18.8억 달러로 나타났다.³⁷⁾ 이것은 비교가능한 180개 국가 중 23위에 해당한다.³⁸⁾ 총량에서와 마찬가지로 $HNODA$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상위권에 드는 수준의 원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일인당 순ODA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얼마만큼의 원조를 받았는가를 비교할

36) $HNODA$ 를 계산함에 있어, 3년, 7년, 9년 평균 등도 계산해 보았으나,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따로 소개하지는 않는다.

37) 다음으로 높은 시기는 1968-72년 기간으로, 이 시기 $HPNODA$ 는 18.2억 달러이다.

38) 5년 연속 ODA를 받은 적이 없는 Kosovo가 제외되었다.

경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원국이 받은 원조액 절대 규모라기보다는 수원국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얼마만큼의 원조를 받았는가 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및 GDP 대비 원조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순ODA 최고액($HNODA_j$)을 해당 시기 인구로 나눈 인구일인당 순ODA 최고수령액(HPNODA)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HPNODA_j = \frac{HNODA_j}{Population_{jk}} \quad (8)$$

각국의 인구 정보는 Penn World Table (PWT) 8.0를 이용하였다. 이 DB에는 167 개국이 포괄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다. DAC DB와 PWT DB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모두 134개국으로 DAC DB(181개국)에서 47개국이 제외된다. 제외되는 국가 중에는 ODA 총액 상위 25위 안에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19위)과 알제리(24위)도 있다. 하지만 <표 4>에서 평균값, 중위수를 비교해보면 대개는 ODA 총액이 낮은 국가들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HPNODA를 계산해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1955-59년에 평균 83.0 달러로 비교가능한 134개국 중 74위에 해당한다. ODA 전체 규모와는 달리 인구일인당 받은 ODA의 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받은 규모가 결코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4. GDP 대비 ODA

마지막으로 ODA 수령액을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순ODA 최고액($HNODA_j$)을 해당 시기 GDP로 나눈 GDP 대비 순ODA 최고수령액(HGNODA)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비교하였다.³⁹⁾

$$HGNODA_j = \frac{HNODA_j}{GDP_{jk}} \quad (9)$$

39) 달러 표시 GDP 중 어떤 값을 쓰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 34 참조. 여기에서는 국제비교상의 일관성을 위해 Penn World Table을 이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순ODA는 1954-58년에 최고점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는 GDP의 7.0%였다. 이것은 비교 가능한 134개국 중 49위에 해당한다. 인구와 마찬가지로 GDP로 나누었을 때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한국에 제공된 ODA가 국민일인당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위권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5. 종합 및 평가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ODA 수령 규모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규모는 절대 규모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 ODA 수원국들 가운데 약 20위 정도의 수준에 속한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ODA를 위해 사용된 총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이 우리나라에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수령 수준은 중위권 정도를 차지한다.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원조를 통한 “큰 밀어주기”에 기인하였다는 명제를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조 수령 규모가 월등히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원조의 효과적 활용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원조를 비교적 적체적소에 활용하거나 부정부패로 인한 누출(leakage)을 비교적 잘 통제했기 때문에 원조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이것은 원조의 효과성이 수원국 정부의 책무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Burnside and Dollar (2000)의 주장과 일관된 것이다.

둘째는 원조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기보다 경제안정화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을 가능성이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소비재 원조가 물가안정 또는 사회 정치적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이것이 자생적 투자를 유발하였다면, 원조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과연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까? 혹은 원조는 위의 두 경로가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작동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도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조와 경제발전은 상관관계만이 존재할 뿐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처럼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본 연구의 묶은 원조 수령 총액의 규명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을 의미있는 형태로 제기하는 것까지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탐구해 나아가기로 한다.

V. 결 론

해방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대외 원조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은 원조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주장한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1950년대로부터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학자들은 원조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도운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들은 아쉽게도 별다른 심도 있는 근거를 수반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원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기반을 크게 허물어뜨림으로써 이 논쟁은 소멸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작용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연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답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원조를 받았는가를 규명하고 이것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궁구하였다. 분석 결과,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 경상액 기준으로 약 77억 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약 456억 달러였다. 휴전이 이루어진 1953년부터 199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면, 명목 ODA 수령액은 69억 달러, 2010년 기준 실질액은 391억 달러가 된다. 이 원조 가운데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총액은 약 20위 정도 수준이다. 원조제공국가들은 원조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다. 그러나 인구 일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받은 ODA가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물론, 전 세계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 나가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1. 강석인,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장원출판사, 1994.
(Translated in English) Kang, Suk-in,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eoul: Changwon, 1994.
2. 국회사무처, 『미국의 연방예산과정』, 예산정책자료 제97-01호, 국회사무처, 1997.
(Translated in English)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Federal Budget of the United States*, Policy Report #97-01, 1997.
3.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Nyeon ed., *Long-term Statistics of Korea: National Account 1911-2010*, Seoul: SNU, 2012.
4. 김대환,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pp. 157-255.
(Translated in English) Kim, Dae-hwan, “A Study on the Korean Economy in the 1950s,” Duk-kyu Chin et al, *Understanding the 1950s*, Seoul: Hangilsa, 1981, pp. 157-255.

5. 김양화, “미국의 대한원조와 한국의 경제구조,” 송건호 · 박현채 외, 『해방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pp. 227-274.
(Translated in English) Kim, Yang-hwa, “U.S. Aid to Korea and Structure of Korean Economy,” Keon-ho Song, Hyun-chae Park, and others, *New Understanding of the Forty Year after the Liberation*, Vol 1, Seoul: Dolbaegae, 1985, pp. 227-274.
6. ———, “서평: 이대근 저,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경제사학』, 11, 1987, pp. 304-309.
(Translated in English) Kim, Yang-hwa, “Book Review: Lee, Dae-Keun, The Korean War and Capital Accumulation of the 1950s. Seoul: Kkachi, 1987,” *Review of Economic History*, 11, 1987, pp. 304-309.
7. 김준경 · 김광성, 『한국의 원조 수혜 경험 및 활용』, 기획재정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2.
(Translated in English) Kim, Joon-kyung, and Kwang-sung Kim, *Korean Experience of Receiving Foreign Aids and Their Utilization*,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and KDI School, 2012.
8. 김찬진, 『외자도입론』, 일조각, 1976.
(Translated in English) Kim, Chan-jin,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Seoul: Iljokak, 1976.
9. 노중기, “1950년대 한국사회에 미친 원조의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사연구회, 『현대한국의 자본축적과 민중생활』, 문학과 지성사, 1989, pp. 11-112.
(Translated in English) Noh, Chung-ki, “A Study on the Impact of Foreign Aids on the Korean Society,” 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Capital Accumulation of Modern Korean and People's Lives*, Seoul: Munhak-kwa-Jisung-sa, 1989, pp. 11-112.
10. 박찬일, “미국의 경제원조의 성격과 그 경제적 귀결,” 김병태 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pp. 67-95.
(Translated in English) Park, Chan-il, “The Nature of U.S. Aids and Their Economic Consequences,” Kim, Byung-tae et al.,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y*, Dolbaegae, 1981, pp. 67-95.
11.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작과비평사, 2006.
(Translated in English) Park, Tae-gyun, *The Ally and the Empire: Two Myths of Korea-U.S. Relations*, Seoul: Changjak-kwa-Bipyung-sa, 2006.
12.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1978.
(Translated in English) Park, Hyun-chae, *National Economics*, Seoul: Hangilsa, 1978
13. 배인철, 『1950년대 원조와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Translated in English) Bae, In-chul, *A Study on the Aids of the 1950s and Evolution of the Korean Capitalism*, M.A. Thesis, Korea University, 1988.
14. 사공일 외, 『한국경제60년사』,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Translated in English) Sagong, Il et al, *Sixty-year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Committee for the Sixty-year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2010.
15. 서남원, 『외국원조의 이론과 실제: 한국 자본 형성에 있어서 외원의 기여』, 한국연구원, 1963.

- (Translated in English) Suh, Nam-won, *Theory and Practice of the Foreign Aid: Contribution of the Foreign Aid to the Capital Formation of Korea*, Institute of Korea Studies, 1963.
16. 서석태 · 강정모, 『외자도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단기78-03, 1978.
(Translated in English) Suh, Suk-tae, and Jung-mo Kang,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Foreign Capital on the Korean Economy*,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78-03, 1978.
 17. 이경구,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연구2004-1-25, 한국국제협력단, 2004.
(Translated in English) Lee, Kyung-koo, *Development Aids and Cooperation to Korea*, #2014-1-25, KOICA, 2004.
 18. 이대근, “차관경제의 전개,” 이대근, 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pp.163-190.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Keun, “Evolution of the Foreign Capital Economy,” Dae-Keun Lee and Un-Young Chung ed., *Study of the Korean Capitalism*, Kkachi, 1984, pp.163-190.
 19. ———, 『성장의 허상, 외채의 실상: 한국경제의 위상』, 지식산업사, 1986.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Keun, *Illusive Growth and Actuality of Foreign Debt: Condition of the Korean Economy*, Seoul: Chisik-Sanup-Sa, 1986.
 20. ———,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창작사, 1987.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Keun,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y*, Seoul: Changjak-sa, 1987.
 21. ———,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1987.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Keun, *The Korean War and Capital Accumulation of the 1950s*, Seoul: Kkachi, 1987.
 22. ———,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Keun, *The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50s: A Study on the Historical Foundation of Industrialization*, Seoul: SERI, 2002.
 23. 이재희, “자본축적과 국가의 역할,” 이대근 · 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pp.193-219.
(Translated in English) Lee, Jae-hee,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Dae-Keun Lee and Un-Young Chung ed., *Study of the Korean Capitalism*, Kkachi, 1984, pp.193-219.
 24. 이철순,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연구(1948-1960)』,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Translated in English) Lee, Chul-soon, *A Study of U.S. Policy to Korea During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1948-1960)*, Ph.D. Dissertation of Poli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25.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2009.
(Translated in English) Lee, Hyun-jin, *U.S. Policy of Economic Aids to Korea*, Seoul: Hye-an, 2009.
 26. 장상환, “해방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과정,” 송건호 · 박현채 외, 『해방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pp. 83-110.

(Translated in English) Chang, Sang-hwan, "Rise of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to the United States after the Liberation," Keon-ho Song, Hyun-chae Park, and others, *New Understanding of the Forty Years after the Liberation*, Vol. 1, Seoul: Dolbaegae, 1985, pp. 83-110.

27. 재무부 경제협력국, 『공공차관통계: 협약체결기준』, 공공차관 87-3, 재무부, 1987.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Finance, *Statistics of Public Loan*, Ministry of Finance, 1987.

28. 재무부, 『공공차관현황: 1988. 12. 31. 현재』, 재무부, 1989.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Finance, *Current State of Public Loan*, Seoul: Ministry of Finance, 1989.

29. 재무부 · 한국산업은행, 『한국외자도입30년사』, 재무부 · 한국산업은행, 1993.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Finance and Korea Development Bank, *Thirty-year History of Foreign Capital in Korea*, Ministry of Finance and Korea Development Bank, 1993.

30. 정일용, "외자도입," 변형운 편, 『한국경제론』, 개정판, 예풍출판사, 1989, pp. 475-524.

(Translated in English) Chung, Il-yong,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Hyung-yoon Byun ed., *A Study of the Korean Economy*, Revised Edition, Seoul: Yepung, 1989, pp. 475-524.

31. ———, "원조경제의 전개," 이대근 · 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pp. 133-161.

(Translated in English) Chung, Il-yong, "Evolution of the Aid Economy," Dae-Keun Lee and Un-Young Chung ed., *Study of the Korean Capitalism*, Kkachi, 1984, pp. 133-161.

32.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Translated in English) Chung, Chin-a, *A Study on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of Lee Seung-man Administration (1948-1960)*,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2007.

33.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 이대근 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 2005.

(Translated in English) Choi, Sang Oh, "Foreign Aid and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n Dae-keun Lee et al, *A New Histor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eoul: Nanam, 2005.

34. ———,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업화 전략," 『경제사학』, 35, 2003, pp. 135-166.

(Translated in English) Choi, Sang O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the 1950s," *Review of Economic History*, 35, 2003, pp. 135-166.

35.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년도.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Yearbook*, Seoul: BOK, years.

36. ———, 『IMF 신기준에 의한 개편 국제수지통계 해설』, 1998.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Explaining Statistics of International Balance of*

- Payments Based on New Standard of IMF*, Seoul: BOK, 1998.
37. _____, 『국제수지통계』, 1987.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Statistics of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Seoul: BOK, 1987.
38. _____, 『한국의 국제수지』, 1970.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Seoul: BOK, 1970.
39. _____, 『국민소득연보 1953-67』, 1968.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Yearbook of National Income 1953-1967*, Seoul: BOK, 1968.
40.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1962.
(Translated in English) Hong, Sung-yoo, *The Korean Economy and the U.S. Aid*, Seoul: Pakyoungsa, 1962.
41. _____,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Translated in English) Hong, Sung-yoo, *Capital Accumulation of Korean Economy*, Seoul: Korea University, 1965.
42. Banerjee, Abhijit, and Esther Duflo,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PublicAffairs, 2011.
43.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4, 2000, pp.847-868.
44. _____, "Aid, Policies, and Growth: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3, 2004, pp.781-784.
45. Chang, Charles C., Eduardo Fernandez-Arias, and Luis Servén, "Measuring Aid Flows: A New Approac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50, The World Bank, 1999.
46. Cole, David, "Foreign Assistance and Korean Development", in Edward Mason et al.,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Ch. 6.
47. Collier, Paul, *The Bottom Billion: 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i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48. Easterly, William, "The Big Push Déjà Vu: A Review of Jeffrey Sachs's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1), 2006, pp.96-105.
49. _____, *The White Man's Burden*, Penguin Books, 2006.
50. Easterly, William, Ross Levine, and David Roodman, "Aid, Policies, and Growth: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2004, pp.774-780.
51. Krueger, Anne, The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 in Korea's Development, *Korea Modernization Study Series*, 5, 1977.
52. Moyo, Dambisa,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53. Murphy, Kevin, Andrei Schleifer, and Robert Vishny, "Industrialization and the Big

- Pu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5), 1989, pp.1003-1026.
54. OECD, "Is it ODA?," Factsheet - November 2008, OECD. (www.oecd.org/dac/stats/34086975.pdf).
55. Sachs, Jeffrey,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Penguin Books, 2005.
56. SaKong, Il, and Youngsun Koh eds.,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Sixty-Year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2010.
57. Rosenstein-Rodan, Paul,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Economic Journal*, 53, 1943, pp.202-211.
58. Solow, Robert,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56.
59. Suh, Suk Tai, "Statistical Report on Foreign Assistance and Loans to Korea (1945-75)," Monograph 760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6.
60. _____, *Foreign Aid, Foreign Capital Inflows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 1945-75, Korea Modernization Study Series*, 8, 1977.

〈부표 1〉 우리나라가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1945-1999 (백만 달러)

연도	명목액				실질액 (2010년)					
	증여 (Grant)	양허성 공공차관 (Concessional Loan)		공적개발원조 (ODA)		증여 (Grant)	양허성 공공차관 (Concessional Loan)		공적개발원조 (ODA)	
		조차관 (Gross)	순차관 (Net)	조ODA (Gross ODA)	순ODA (Net ODA)		조차관 (Gross)	순차관 (Net)		
A	B1	B2	A+B1	A+B2	C	D1	D2	C+D1	C+D2	
1945	4.9			4.9	4.9	49.4			49.4	49.4
1946	49.5			49.5	49.5	443.1			443.1	443.1
1947	175.4			175.4	175.4	1,416.5			1,416.5	1,416.5
1948	179.6			179.6	179.6	1,373.6			1,373.6	1,373.6
1949	116.5			116.5	116.5	892.8			892.8	892.8
1950	58.7			58.7	58.7	445.0			445.0	445.0
1951	106.5			106.5	106.5	753.4			753.4	753.4
1952	161.3			161.3	161.3	1,121.5			1,121.5	1,121.5
1953	194.1			194.1	194.1	1,333.8			1,333.8	1,333.8
1954	153.9			153.9	153.9	1,047.7			1,047.7	1,047.7
1955	236.7			236.7	236.7	1,584.1			1,584.1	1,584.1
1956	326.7			326.7	326.7	2,114.0			2,114.0	2,114.0
1957	382.9			382.9	382.9	2,397.8			2,397.8	2,397.8
1958	321.3			321.3	321.3	1,967.8			1,967.8	1,967.8
1959	222.2			222.2	222.2	1,345.0			1,345.0	1,345.0
1960	249.7	-	1.0	249.7	250.7	1,500.7	-	6.0	1,500.7	1,506.7
1961	229.8	-	-0.6	229.8	229.2	1,365.9	-	-4.6	1,365.9	1,361.3

1962	229.4	7.0	6.8	236.4	236.2	1,346.1	40.8	39.3	1,386.9	1,385.4
1963	230.2	32.0	32.0	262.2	262.2	1,376.6	212.5	212.5	1,589.1	1,589.1
1964	155.7	16.3	16.0	172.0	171.7	892.5	132.9	130.4	1,025.4	1,022.9
1965	172.0	53.6	48.5	225.6	220.5	1,002.9	610.5	550.8	1,613.3	1,553.7
1966	145.7	89.5	81.9	235.2	227.6	931.6	614.1	541.9	1,545.6	1,473.4
1967	156.9	107.3	99.2	264.2	256.1	1,027.8	725.1	650.8	1,752.9	1,678.6
1968	139.9	65.0	106.5	204.9	246.4	884.9	418.6	599.9	1,303.5	1,484.8
1969	110.2	194.0	228.1	304.2	338.3	710.1	1,308.6	1,446.6	2,018.7	2,156.7
1970	87.7	150.2	187.0	237.9	274.7	553.1	964.1	1,108.5	1,517.2	1,661.6
1971	69.3	256.2	255.2	325.5	324.5	408.9	1,560.6	1,533.7	1,969.4	1,942.6
1972	87.0	289.5	278.5	376.5	365.4	511.1	1,413.0	1,351.6	1,924.1	1,862.7
1973	61.2	256.3	220.8	317.5	282.0	296.3	1,217.4	1,067.4	1,513.7	1,363.7
1974	62.8	207.8	189.3	270.6	252.1	283.3	934.2	853.3	1,217.5	1,136.6
1975	68.8	217.8	179.4	286.5	248.1	285.6	804.8	664.7	1,090.5	950.3
1976	29.9	233.7	188.0	263.6	217.9	108.9	786.5	623.6	895.4	732.5
1977	43.5	255.4	195.1	298.9	238.5	142.1	832.0	639.4	974.1	781.6
1978	41.2	188.8	122.8	230.0	164.0	111.0	514.3	336.1	625.3	447.1
1979	39.4	178.3	94.3	217.7	133.7	96.1	466.9	247.1	563.0	343.2
1980	41.2	182.7	97.4	223.9	138.6	93.8	465.6	251.4	559.5	345.3
1981	32.9	411.3	297.5	444.2	330.4	81.0	1,024.8	748.1	1,105.8	829.1
1982	50.3	96.5	-16.4	146.8	33.9	129.1	258.4	-36.4	387.5	92.7
1983	30.1	97.2	-22.4	127.3	7.7	79.4	251.2	-50.0	330.6	29.4
1984	31.7	85.2	-68.5	116.9	-36.8	86.8	221.5	-162.8	308.4	-76.0
1985	35.6	82.6	-44.5	118.2	-8.9	97.3	210.3	-100.1	307.6	-2.8

1986	46.5	115.3	-64.1	161.8	-17.6	92.0	210.0	-116.1	302.0	-24.1
1987	67.6	207.2	-56.9	274.8	10.8	112.0	325.0	-92.7	437.0	19.3
1988	73.6	203.8	-64.2	277.4	9.4	111.1	281.4	-99.3	392.5	11.9
1989	78.0	226.2	-26.7	304.2	51.4	122.4	332.4	-43.0	454.7	79.4
1990	104.9	196.3	-52.9	301.2	52.0	152.9	290.5	-79.4	443.5	73.5
1991	100.4	208.1	-46.3	308.6	54.1	141.4	279.1	-67.3	420.5	74.1
1992	121.5	174.1	-124.6	295.6	-3.1	154.3	216.5	-165.3	370.8	-11.0
1993	152.1	125.8	-187.3	277.9	-35.1	175.6	137.1	-222.0	312.7	-46.3
1994	115.5	95.0	-229.7	210.5	-114.2	129.4	94.6	-253.1	224.0	-123.6
1995	148.6	266.2	-91.6	414.8	57.0	150.1	245.2	-107.8	395.3	42.4
1996	146.6	141.1	-295.5	287.7	-148.9	163.1	151.2	-332.4	314.3	-169.3
1997	106.7	9.6	-266.3	116.3	-159.7	133.8	11.6	-324.2	145.3	-190.4
1998	151.0	2.4	-201.3	153.4	-50.4	198.3	3.1	-259.8	201.4	-61.5
1999	158.8	1.5	-213.9	160.2	-55.1	193.8	1.9	-251.7	195.7	-57.9
Total	6,894.3	5,726.5	851.3	12,620.8	7,745.6	34,718.6	18,568.0	10,835.1	53,286.5	45,553.7

자료: 본문 참조.

〈부표 2〉 ODA 규모의 국가별 순위

순위	ODA 총액 (TNODA)		ODA 최고액 (HNODA)		
	국가	ODA 총액	국가	최고연도	ODA 총액
1	India	196,534	Iraq	2004-2008	11,949
2	Egypt	147,880	Egypt	1974-1978	7,910
3	Pakistan	105,889	India	1963-1967	7,821
4	Indonesia	98,152	Afghanistan	2006-2010	5,199
5	Bangladesh	87,319	Nigeria	2005-2009	4,846
6	Vietnam	74,322	Syria	1977-1981	4,013
7	Iraq	73,943	China	1992-1996	3,858
8	China	73,335	Congo, Dem. Rep.	2002-2006	3,092
9	Tanzania	66,346	Ethiopia	2006-2008	3,085
10	Israel	59,441	Pakistan	1963-1967	3,053
11	Ethiopia	55,775	Indonesia	1970-1974	3,050
12	Congo, Dem. Rep.	55,093	Bangladesh	1986-1990	3,033
13	Jordan	52,911	Algeria	1960-1964	2,980
14	Morocco	51,775	Jordan	1979-1983	2,964
15	Syria	50,654	Vietnam	2006-2010	2,844
16	Sudan	49,606	Israel	1983-1987	2,838
17	Mozambique	46,119	Tanzania	2006-2010	2,659
18	Korea	45,554	Sudan	2006-2010	2,279
19	Afghanistan	45,310	West Bank & Gaza Strip	2006-2010	2,207
20	Philippines	43,370	Serbia	2000-2004	2,019
21	Kenya	42,702	Morocco	1978-1982	1,980
22	Turkey	41,718	Mozambique	2002-2006	1,918
23	Nigeria	39,936	Korea	1955-1959	1,882
24	Algeria	36,959	Philippines	1989-1993	1,786
25	Zambia	36,128	Uganda	2006-2010	1,718

주: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 참조.

자료: 본문 참조.

ODA to Korea: Measurement and Comparison*

Duol Kim** · Sangyun Ryu***

Abstract

Korea received a total net ODA of \$7.7 billion on a current basis and \$45.6 billion on a constant 2010 US dollar basis. Much of this assistance was provided before 1980: in a form of grants from 1945 to 1960 and of concessional loans to 1980. Compared to developing country recipients around the world in the post-1960s, Korea ranked 20th, meaning that Korea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assistance from donors. However, in terms of the ODA receipts per head or the ODA receipts to GDP, Korea ranked in the middle among all ODA recipients. These findings provide a couple of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hypothesis based on “Big Push” saying that Korea achieved mor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an other countries thanks to larger assistance does not hold true. Second, if the assistance contributes to Korea’s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that Korea used the assistance more efficiently than other countries did or it set the assistance in motion through other paths such as economic stabilization. These issues are worth exploring further through follow-up studies.

Key Words: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grant, concessional loan

JEL Classification: N15, O1, O5

Received: Feb. 24, 2014. Revised: April 30, 2014. Accepted: June 13, 2014.

*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Measurement and Comparison of ODA to Korea”, KDI Research Paper, 2013. We thank KDI for their financial support. Earlier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APEBHC,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nd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We are grateful to Bokyeong Park and other seminar participants for their helpful comments.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Phone: +82-2-300-0689, e-mail: duolkim@mju.ac.kr

***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28 Yeoui-daero, Youngdungpo-gu, Seoul 150-721, Korea, Phone: +82-2-3777-0665, e-mail: syryu@lgeri.com